

# 고령 운전자 보험료 급상승 ‘고민되네’

### 1년만에 10만원 올라 깜짝...“교통약자 차별이나” 불만 보험사측은 “교통사고 발생률 등 감안 인상 불가피” 면허증 발급도 쉽지 않아...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시급

광주시 서구 A(48)씨는 최근 70대 후반 부모님의 자동차보험 갱신 과정에서 전년보다 10만원 넘게 오른 보험료가 고령 운전자라는 보험사측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 60세에서 70세로 넘어가거나 70세에서 80세로 넘어가는 단계도 아닌데, 고작 1년 만에 보험료가 10만원 넘게 뛰자 황당함을 넘어 화도 치밀었다. 보험회사별로 다르지만 A씨 부모 연령대의 교통사고발생률이 높은 점 등을 감안, 보험료가 증가했다는 게 보험사측 설명이지만 연령대별 사고발생률 차이나 연령대별 보험료 인상분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지도 않고 올리기만 했다는 점에서 불만이 적지 않았다.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환승 체계 등이 불편해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망설이는 고령운전자들이 많다. 고령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운전면허

증을 반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세=2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광주지역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796건(2017년)에서 910건(2018년), 992건(2019년)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각각 7459건(2017년), 7432건(2018년), 8119건(2019년)인 것을 고려하면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비율도 10.67%(2017년)에서 12.2%(2019년)로 증가했다.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10년간(2010~2019년) 65세 이상 운전자는 광주의 경우 지난 2010년 3만 675명에서 2019년 8만3678명으로 늘었

다.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1만2589명(2010년)에서 4만2764명(2019년)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상태. 보험업계가 고령운전자들 교통사고 증가세를 감안,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험업계는 보험사별로 연령대별 보험요율을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지만 고령자의 경우 단순한 연령증가를 보험료율 인상 요인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69세까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낮다가 70세 이후부터는 보험요율을 높여 적용하고 있다는 게 보험사측 설명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전년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아졌지만 보험사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다르다”며 “고령자의 경우 나이가 한 살 많아지더라도 보험요율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교통 약자에 대한 차별 아니냐=대중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는데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것은 교통 약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당장, 도심인 광주지역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환승하는데 걸리는 시간

도 많고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다는 게 고령자들의 한탄이다. 전남 지역 사정은 더하다. 1000원 택시제도 등이 도입되긴 했지만 여전히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지역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허반납제도 이용제도 고령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6월 말 기준)는 8만 4101명으로 3년 전인 2017년(6만 8340명)보다 23% 늘어났음에도, 같은 기간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2977명이 전부다. 노인들 사이에서는 고작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주며 면허증을 반납하라는 광주시 정책도 고령자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백승권 광주시 교통문화연수원 과장은 “광주시는 현재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게 편한 도시”라며 “고령운전자의 운전 특성은 단거리 운전으로 교통인프라를 구축과 함께 면허 반납을 요구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역대 보험사기 공무원 벌금형 선처 왜?

### 법원 “범행 정도·나이 고려 징역형은 가혹”...공무원 신분 유지

법원이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공무원에게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공무원이 되기 전에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을 형사처벌해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이라는 직장을 잃게 되는데, 범행 정도·나이 등을 고려하면 가혹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보험사기 혐의(사기)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실형(징역 10개월)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한 것이다. A씨는 브로커와 공모, 허위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사기죄(형법 347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에 두 가지 이상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장 중한 형량의 2분의 1을 더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을 적용한다. 사기죄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통상 피해 금액이 1억원이 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실형 대신, 비교적 고액 벌금인 2500만원을 선고했다. 초범, 진지한 반성, 일부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점, 피해 보험사와 일부 합의한 점, 소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재판부는 1심대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공무원직을 잃게 되는 만큼 ‘1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층간소음에 화나... 랜덤채팅으로 화풀이

### 여성 가장해 윗집 주소지 올려 남성 방문케한 20대 입건

층간소음을 참지못해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해 모방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북부경찰은 27일 채팅어플에 윗집 주소지를 올려 불특정 남성들의 방문을 유도한 혐의(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로 박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일 새벽 익명의 채팅어플에서 여성을 가장해 “나를 만나려면 찾아오라”며 층간소음을 일으킨 자신의 윗집 주소지를 올려 남성 3명을 유인, 초인종을 누르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랜덤채팅 단체방에서 5명의 남성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고, 이들에게 잠금장치가 된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명 중 3명의 남성이 새벽 1시~새벽 4시·오전 11시까지 각각 찾아와 해당 주소지의 초인종을 4회 가랑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언론에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이날 부모와 동행해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 18일 수술 후 휴식을 위해 부모집인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를 찾은 박씨는 윗집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음이 2차례 정도 항의를 했지만, 이후에도 소음이 계속 이어지자 화를 참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박씨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거짓 주소로 남성을 유인해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범죄를 모방해 19일 새벽 랜덤채팅에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맛비 우산 행렬 27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이번 비는 28일 오후 그칠 것으로 보이며 예상강수량은 50~150mm, 일부지역에는 시간당 30~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노조 설립 개입’ 호원 압수수색...수사 관심

기아차 1차 협력업체인 ㈜호원의 노조 설립 과정에서 회사측의 개입 의혹 등 부당노동행위(광주일보 2020년 3월 18일 6면)와 관련,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금속노조 호원지회 등은 이

날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24일 부당노동혐의로 호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노조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

디스크, USB 등을 복사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금속노조 호원지회 설립 과정에서 사측이 부당하게 개입, 노조 가입을 막고 다른 노조 설립을 지원했다며 회사측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호원은 기아차 1차 협력업체로 광주지역 대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로, 전체 직원이 400명이 넘어 과반 노조 구성에 따른

교섭권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갈등이 치열하다. 이 과정에서 강성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회사측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 호원지회측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고소고발을 하면서 문자, 카톡, 녹취내용을 증거로 제출했고,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평가점수

### 법원 “비공개 대상 정보 아니다”

우수운영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평가지표별 점수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A씨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북구청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

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북구 아동센터의 ‘2018년 우수운영보조금 평가지표별 점수 및 합계 점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북구청의 비공개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평가자가 누구인지, 평가자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나타나있지 않고 공개하더라도 북구청의 향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